

2011년 낙농 및 유가공 산업을 되돌아 보면서



박 상 도
한국유가공협회 회장

1. 서론

우리나라 낙농의 역사는 1900년대 최초로 우유를 착유하기 시작하여 1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95년 UR 협상타결 이전 까지만 해도 정부의 유제품 수입 금지를 통하여 낙농 및 유가공산업은 보호, 육성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무역이 자유화되고 국가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가 되었고, 미국과의 FTA 비준 통과로 2012년 1월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등 낙농선진국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와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예고되고 있어 끊임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2011년 한해 낙농 및 유가공업계를 뒤 돌아 보면 크게 구제역사태, 한·EU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생산비 상승에 따른 원유가격 인상,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후유증 등 많은 현안과 이슈가 있었지만, 올 한해는 화합과 동반성장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2. 구제역 사태

2011년 낙농 및 유가공업계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구제역이라는 큰 사태를 겪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전체의 목장들이 폐쇄 되고, 해당 목장의 모든 젖소가 매몰 처분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위험지역, 경계지역 등으로 원유의 폐기, 시유생산금지와 분유생산, 이동제한, 유제품의 수출금지 등 모든 것이 일시에

발생함으로써 낙농 및 유가공업계는 그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몇 차례 구제역 발생을 겪었지만 이번 같이 낙농뿐만 아니라 유가공업계의 피해까지는 상상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전체 낙농가의 10% 해당하는 638농가와 36,400여두의 젖소가 매몰 살처분 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낙농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표에서와 같이 계속 낙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가의 급격한 감소는 앞으로 적정한 낙농기반유지와 생산량을 확보하기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단위 : 가구, 두, %

구분	1990(A)	1995	2000	2005	2010	2011년 6월(B)	B/A
사육 가구수	32,277	23,519	13,348	8,923	6,347	6,123	18
젖소 마리수	503,947	553,467	543,708	478,865	429,547	402,528	79.9
호당 평균 사육두수	15.1	23.5	40.7	53.7	67.7	65.7	435
호당평균 생산량(kg/일평균)	144	233	461	685	895	-	-

〈표 1〉 낙농변화 추이

3.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유럽연합공동체(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EU 국가를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8차 협상을 끝으로 2009년 10월 19일 가서명 이후 2011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다. 유럽공동체는 낙농 선진국이면서 대표적인 유제품 수출국이다. 발효 첫해의 관세할당물량은 치즈 4,560톤, 식용유장 3,350톤, 조제분유 450톤은 매년 복리로 3%씩 증량 후 최종연도[치즈 15년(체다치즈 10년), 그 외 10년]이후 무제한으로 풀리게 되어있다. 그리고 분유 1,000톤(15년 이후 고정), 버터 350톤(10년)도 마찬가지로 복리 3% 증량 후 최종연도는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연간 수입쿼터는 '04년부터 '06년 3개년 평균 수입량으로 이미 수입이 되고 있는 물량으로서 당장 국내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과의 FTA 발효도 마찬가지이다. 발표 첫해의 관세할당물량은 치즈 7,000톤, 식용유장 3,000톤, 조제분유 700톤이며 무제한 개방 시기는 EU방식과 동일하다. 그리고 수입권 공매물품인 분유 5,000톤, 버터 200톤 물량이다. 그러나 10 ~ 15년 후 무제한으로 풀리게 될 경우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 및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 낙농 및 유가공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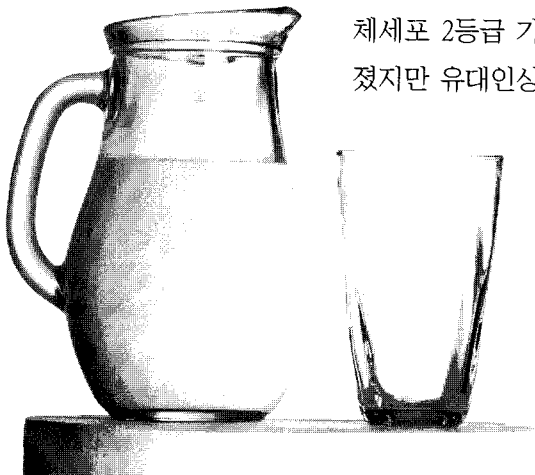
4. 원유가격 협상과 갈등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로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갈등과 반목을 꼽을 수 있겠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한해가 아닌가 싶다.

원유가격 인상요구는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의한 산유량 감소로 인한 낙농가의 채산성 악화와 사료가격 인상, 유류대 및 각종 기자재 비용 등 제반 비용 상승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유부족 현상 해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11년 5월 9일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 6인으로부터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를 시작으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

당초 원유기본가격 인상요구는 '11년도 우유생산비(758원/ℓ)와 '08년 추정 생산비(585원/ℓ)를 대비하면 173원(29.6%)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상안을 검토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 생산자, 수요자, 학계, 업계, 소비자 등 많은 관련 인사들이 유형과 무형의 인적, 물적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여의도 광장에서의 농성과 납유거부 사태 등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이견으로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정부중재안으로 8월 16일부터 기본가격과 체세포 2등급 가격인상을 포함하여 138원/ℓ(19.6%)유대인상이 이루어 졌지만 유대인상 때 마다 이러한 갈등과 반목의 폐단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후부터는 가격 연동제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5. 원유가격 인상 이후의 유가공업계의 어려움

2011년 8월 16일 유대인상은 되었지만 그동안 유제품의 원가도 많이 인상이 되었다. 예로서 큰 폭의 기름값 인상에 따른 물류비 상승, 각종원부자재인상, 인건비 상승 등 모든 제반 비용이 인상되었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격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 감내해왔다. 하지만 원유가격이 인상됐을 때 시유를 비롯한 원가가 바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유가공업계는 그대로 손실로 이어진다. 당초 원유가격 인상은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 중재안으로 수용이 되었다. 그러면 제품가격도 원유가격 인상분과 그 동안 물가인상분 등으로 인해



원가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품가격 인상을 연말까지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많은 손실을 감내했다. 연말까지 자제할 경우 무려 1,000억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감내할 수가 없어 11월부터 원유가격 인상분 정도만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약 75일간 유가공업계는 약 540억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의 후 제품가격 인상시기와 같은 시기에 원유가격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유가공업계에 유제품 할당관세를 도입하여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할당관세의 제도는 수입원료의 국제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제품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한 기업에 원가절감 등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면서 이번에는 구제역 피해로 인한 유제품 수급불안정으로 인하여 가격 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물론 할당관세는 기업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됨으로써 관련 전방제품가격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다.

6. 낙농제도 개선과 과제

정부의 낙농종합대책의 큰 틀은 지난 2010년 3월 5일 생산자단체, 유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낙농종합대책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중 주요한 추진 과제는 크게 4개 항목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수급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인 국내 우유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계획 생산제를 추진하고, 둘째,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개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새로운 우유의 수요를 창출하고, 셋째, 우유·유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마지막 넷째는 기타제도개선으로 낙농진흥회 희망농가에 대하여

유업체 직거래체계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협동조합이 집유하도록 원유거래체계와 쿼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낙농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업계에서도 이견이 많아 전문가의 자문과 정부, 학계, 업계, 생산자, 농협, 낙농진흥회 실무자를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여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낙농종합대책시행을 위한 쟁점사항을 남겨두면서 제도개선을 진행하였지만, 또 다시 2011년 8월 16일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많은 갈등과 반목을 겪고 난 후, 원유가격 연동제를 위한 원유가격 조정 검토와 과도한 유통비용절감,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앞으로 무역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낙농제도개선을 통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낙농산업 제도개선 TF에는 당초 원유가격 조정위원회, 낙농제도 개선위원회, 유통구조 개선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11년 9월 1일부터 각 분과위원회가 격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원유가격 연동제 부분에서 정부와 생산자, 수요자 서로 다른 이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 우선 연동제만이라도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결 언

낙농과 유가공산업은 전·후방산업으로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다. 특히 2011년 한해를 돌아보면 국제 곡물가격과 기름 값 상승 등 모든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낙농뿐만 아니라 유가공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장의 원유 생산비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대인상을 위하여 생산자와 수요자 협의과정에서 3개월 이상 마라톤 협상을 겪으면서 서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다. 또 다시 이런 전례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유대 협상 후 형성된 공감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어야 한다. 매번 올라가기만 하면 과연 우리나라 유제품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느낄지 걱정이 앞선다. 유럽연합, 미국, 낙농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질과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여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유가공업계와 갈등과 반목에서 이제는 서로 상생협력의 동반자로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